
 ◆ 政府施策 ◆

'96년 하반기 經濟運用 方向 확정

— 산업기술연수생 1만명 추가 도입 등 —

정부는 올해 7~7.5%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4.5%를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적정성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당초 전망의 2배에 달하는 110억~120억달러로 수정 전망했다. 정부는 金泳三大통령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9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비용-저능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만명을 추가 도입해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제도를 개선, 현재 30대 계열기업으로 돼있는 적용대상 기업을 여신규모 2천500억원 이상인 기업군(약 50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 국책사업의 공사추진절차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방공단의 용수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개발공단에 대해 산지전용부담금 감면폭을 50%에서 70%로 늘리며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민간개발공단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고 현재 10%이내로 돼있는 30대 기업집단의 협력업체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 인정 한도를 20% 정도로 확대하며 내년에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현행 12%인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수출 主導 重化學工業 고도화

— 通産部, 30개산업 競爭力강화대책 마련 —

정부는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11개, 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 미래 유망산업 9개 등 총 3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朴在潤 통상산업부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정보통신기기·일반기계·가전제품·중전기·금속제품·금형 등 11개 중화학공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는 비메모리분야, 철강은 특수강, 조선은 특수선, 석유화학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가전제품은 고선명 TV와 같은 첨단가전 쪽으로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수요가 11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올해의 25억달러보다 크게 늘리고 대상에 대기업이 생산해 대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기계를 포함시키며 시제품 개발자금 규모를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비롯한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의 적용시한을 오는 9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섬유원료 및 섬유사·직물·섬유제품·제지·신발·피혁·생활용품·요업제품·타이어·플라스틱제품 등 10개 중소기업형 경공업산업은 국내의 생산기지를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 및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저가 완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월드컵 특수에 대비해 고기능성 신섬유와 전자악기·안경테·스포츠용품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펄프와 원면 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자재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며 원피수입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유망산업으로 광학기기와 신소재·정밀화학·생물·항공기·평판디스플레이·환경설비·전자의료기기·정밀계측기기 등 9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고 광학기기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은 대학에 학과설치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보고했다.

30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重電機器 : 공인시험검사능력 부족

- 시험·검사설비 확충 및 국제인증 획득 추진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내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 통산부, 中企 자금난 완화 —

- 통상산업부는 수차례의 전문가협의회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는바, 통산부는 이 방안에 대하여 재정원 등 관계부처와 이달중 협의를 마치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입법조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금년중에 마무리지을 계획임.
-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는 연구개발위주의 제조업 패러다임변화등 지식기반사회의 하나로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됨.
- 통산부는 연구개발위주의 제조업 패러다임변화 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이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의 중소기업중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8%에 불과하는 등 우리의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미미하고, 그나마 기술만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현재의 금융제도하에서는 성장이 쉽지않은 실정임.

—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우리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120억원 전까지는 기술신용 보증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활발한 성장이 가능하나,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어 주식시장에 상장 이 되기 전까지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을 더이상 이용하기가 어렵고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등 물적 담보중심의 담보관행으로 인하여 이들 기업은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M&A를 당하는 등 성장이 매우 어렵게 됨.

더군다나, 통산부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패턴이 기존 선진국의 기술을 개량하는 개량위주의 패턴에서 신제품개발 위주로 전환되게 되자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의 실패도 늘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음은 물론 기술개발의 실패가 기업의 도산, 재정충격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연구개발관련 아이디어 제안을 100으로 할 때 우리의 기술개발 성공 과제는 93년 이후 8.8%로 나타나,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개도국의 12%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었고 미국, 일본의 6~8% 수준에 육박하게 되어 기술개발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졌으며
-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자금은 대부분 내부자금(71.7% 94년)과 은행의 융자(18.1%)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개발은 기업단독으로 수행(70%)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실패는 바로 도산 또는 재정적인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통산부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분산, 최소화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들 제도를 시범단계('97~'98), 예비단계('99~2000)를 거쳐 2001년대 이후 본격 도입하여 갈 계획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범 및 예비단계에서는

-기술담보의 경우

- 기술평가기능에 대해서는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능을 활성화 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가칭, “기술감정평가원”을 설치하고
- 담보제도 참여금융기관은 시범단계에서는 정부기금취급기관에 한정하되 예비단계에서는 일반은행 및 중금사, 창투사 등으로 참여금융기관을 확대하며
- 대상자금은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으로 한정하되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의 타 재정자금으로 확대하여 나가고
- 금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입법의 추진 등 기술담보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여 갈 계획임.

〈시범 및 예비단계의 기술담보제도 도입추진계획〉

○ 제 1 단계 ('97~'98 : 시범단계)

- 시범실시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담보평가기능을 활성화
- 담보제도 참여금융기관은 정부기금 취급 기관으로 하고 대상자금도 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으로 한정
- 기술담보·보험기금의 설치

○ 제 2 단계 ('99~2000 : 예비단계)

-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본격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기술감정평가원의 설치 및 지방조직 구축
- 일반은행 및 증권사, 창투사 등으로 참여금융기관을 확대
- 정부의 타 재정자금으로 대상자금을 확대

- 기술보험의 경우에는

-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범단계에서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를 “시범기술보험사업자”로 지정·운영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가칭, “기술보험공사”를 설치하고
- 보험대상 기술혁신단계는 시범단계에서는 연구개발단계로 한정하되 예비단계에서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단계로 확대하고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 기술개발성패판정기법개발, 성패판정인력양성 및 입법촉진등 기술 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갈 계획임.

〈시범 및 예비단계의 기술보험제도 도입추진계획〉

○ 제 1 단계 ('97~'98 : 시범단계)

- 시범실시를 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준비
-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개발성패 판정기능을 활성화하고 동 연구소를 “시범기술보험사업자”로 지정
- 보험대상 기술혁신단계는 연구개발단계로 한정
- 기술담보·보험기금의 설치

○ 제 2 단계 ('99~2000 : 예비단계)

-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본격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기술보험공사의 설치 및 지방조직 구축
- 보험대상을 기술혁신의 전반적인 단계로 확대

〈2001년 이후의 본격도입단계에서는

- 기술담보제도의 경우는

-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부의 손실보전없이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 기술보험제도의 경우는

- 기술보험공사를 통하여 공보험 형태로 운영하되 민영보험의 발달을 촉진하고 기술보험공사를 궁극적으로 민영화하여 운영하여 갈 계획임.

〈본격도입단계의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추진계획〉

○ 기술담보제도

- 담보대상기술, 대상자금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되 특히 모든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 정부의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

○ 기술보험제도

- 기술보험공사를 통하여 공보험형태로 운영하되 민영보험 발달을 촉진
- 궁극적으로 기술보험공사도 민영화하여 운영
- 정부의 손실보상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

〈통산부는 이같은 “기술담보 및 보험제도 도입방안”의 도입을 적극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97년에는 우선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기술평가기능활성화, 평가기법 개발 및 기술평가인력양성을 위하여 20억원,
- 기술담보 및 보험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통산부는 이 방안에 대하여 재경원, 과기처,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7월 이내에 마무리짓고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금년중에 제도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여 갈 계획임.

소액수출 承認免除범위 확대 - 通産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시행 -

7월1일부터 소액수출 승인면제범위가 현행 3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國內에서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한 AS용 부품중 외국제품의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에서 직접 수입, 공급할 수 있게 된다.

通産部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 갔다.

이에따라 5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수출절차가 간소화됐다.

통산부는 또 세관의 수출입면제가 폐지,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등의 경우 종전 수출입면장으로 수출입 이행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수출입신고필증으로 대신토록 했다.

DNV 인증기관지정 - 通産部, 외국기관중 처음 -

통상산업부는 외국인인증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DNV를 품질보증체제(ISO 9000) 국내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ISO 9000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품질인증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평가연구소 등 국내기관 9개와 외국기관 1개등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통상부는 DNV 이외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5개 외국인인증기관도 빠른시일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인증기관은 아무런 제한없이 국내기업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주)DNV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노르웨이 선급협회의 한국내 독립법인으로 92년 한국지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140여건의 인증서를 발급해왔다.